

KDI정책포럼 제167호(2003-05)
(2003. 10. 13)
내용문의: 유경준(958-4045)
구독문의: 발간자료상담실(958-4326)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di.re.kr>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 경 준 (연구위원)

요 약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정부로부터 공적이전(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하여,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2000년 현재 OECD국가 중 양자 모두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2) 한편, 공적이전 수령 및 조세납부 以前の 소득인 시장소득(market income) 기준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OECD국가의 중간이하 정도로 판단됨.
- 3) 한국의 세전 및 세후 소득불평등도 차이는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증가하였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위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2000년 이전에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가 외국에 비하여 적은 점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등의 미성숙에 따라 아직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이 덜 성숙되어 있는 데 기인하나,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선택은 신중할 필요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의 절대금액이 외국에 비해 작아 세입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며,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낮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
 - 또한 GDP 대비 사회보장관련지출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향후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전지출의 확장시에는 지원대상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제도적 보완 필요
- 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는바, 향후 복지 및 분배정책의 기본방향은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
 - 1990년대 이후 외국 및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른 학력별(기능별) 임금격차의 확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및 무직자의 증가로 향후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구조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용이하지도 않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빈곤정책에 주력할 필요
 -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와 실업률의 감소를 도모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를 통하여 빈곤과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의미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소득분배(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 수준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의 악화는 대체로 실직자의 증가,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기술진보에 따른 학력별 임금격차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¹⁾ 보다 심층적인 원인이나 외국과 비교한 한국의 소득분배의 실태는 아직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²⁾ 또한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도 1990년대 들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Smeeding[2002]),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고심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떠한 소득분배정책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을 OECD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로 주로 실직에 기인하여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2000년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양자가 모두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이전 및 조세납부 以前 소득인 시장소득(market income) 기준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전후로 역시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OECD국가의 중간이하에 속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한국에 있어 양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이 덜 성숙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1) 유경준·김대일(2002) 참조.

2) 여기에서 다루는 소득의 개념에는 토지나 재산소득 자체의 증감을 통한 소득의 변동은 제외됨.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만이 포함됨. 외환위기 이후 자산소득이 더욱 불평등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그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음.

2. 국제비교 방법

국가간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상황을 비교할 때는 무엇(what)을 어떻게(how) 비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의에 의해 분류되는 소득을 어떻게 상호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편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소득으로 비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외국에서 국가간의 소득분배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LIS(Luxembroug Income Study)의 방식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재분류한 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하였다.

가. 소득에 대한 정의 및 한국에의 적용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의 국제비교는 서로 다른 국가간 소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의와 방식,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정의상 차이점들 모두 제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불평등도 추정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며, 시장소득(market income)도 공적이전소득의 수령 및 조세납부 이전의 소득불평등도 비교를 위해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LIS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간의 소득분배구조의 비교를 시행한 OECD (1995)의 연구와 LIS 자체의 연구를 참조하여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시행하였다.

LIS 소득의 정의를 우리나라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소득정의와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가구소비실태조사』(2000)에서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제비교시는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은 LIS에서 사용하는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경상소득은 LIS의 총소득(gross income)과 유사한 개념이 되며, 이 총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를 제하면 가처분소득을 구할 수 있다.

국제비교를 위한 한국의 소득자료로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택한 이유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소득관련 조사자료 중 국제기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먼저 LIS는 국제비교를 위한 소득자료의 전제조건으로 국가기관에서

<표 1> 소득정의의 국제비교

통계청		LIS					
소득 (+)	비경상 소득	퇴직금, 연금일시금, 경조금, 비경상적인 보조금, 보상금, 손해보험금 등					해당사항 없음
	경상 소득	1. 근로소득	compensation of employees	1차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2.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3. 재산소득	realised property income				
		4. 이전 소득	4.1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cash income ¹⁾			
			4.2 공적	social insurance cash transfers + social assistance			
지출 (-)	비경상 지출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장부담금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조세	direct taxes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기타 비경상지출						
소비 지출							

주: 1)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부양금, 양육비 등 기타 정기적인 현금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OECD(1995); LIS 내부자료.

실시한 전국 차원의 연간소득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자료 중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KHPS)나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KLIPS)는 이미 단절되었거나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료로 보기가 어렵고, 통

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으로 한정시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가 LIS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전국을 단위로 조사하였기는 하지만 농어의 소득자료는 통계상의 이유로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하는 경우에도 농어의 소득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계가 있다.³⁾

또한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택한 것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소득조사부분에서 국제비교를 위한 가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조세관련 항목과 사회보장부담금 항목이 1996년이나 1991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1996년의 가계부 기장 방식에 의한 월소득 조사항목에는 위의 변수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에서 언급한 연간소득 기준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개상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1996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치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여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나. 비교대상에 대한 정의 및 한국에의 적용

소득분배의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분석단위는 가구소득이다. LIS와 OECD의 연구 등에서는 가구규모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였다. 즉, 경제적 후생(W) 또는 조정된 소득은 소득(I)을 가구규모의 탄력성(E, 동등화지수)으로 조정된 가구원수(S)로 나누어준 것을 의미한다.

$$W=I/S^E$$

여기서 $0 \leq E \leq 1$ 이며, E가 작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더 큼을 의미한다. 즉, 동등화지수가 1인 경우는 해당가구의 가구원이 증가할 때 규모의 경제가 전혀 없이 소득의 증가가 가구원수 증가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야 전과 같은 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등화지수가 0이면 해당가구의 가구원이 증가할 때 추가소득이 없더라도 전과 같은 후생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농어의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을 조사하는 경우 그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전적으로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에 대한 판단은 현시점에서 어려움.

여기에서 동등화지수(equivalence index)를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즉 가구원수가 다른 경우에 가구소득을 어떻게 동일한 단위로 통일해주느냐의 문제는 사회 관습과 제도가 다른 나라간의 소득분배를 비교하는 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각국에서 동등화지수에 대한 산출방식은 빈곤선의 설정 등을 위한 연구에서 아주 많은 시도들이 있으며, 주로 동등화지수로 0.5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도 최근에 LIS를 중심으로 연구된 외국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추이 비교를 위하여 동등화지수로 0.5를 사용하였다.

3. 소득분배 수준의 국제비교

가.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

1)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에 사용되는 소득개념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가처분소득이며, 또한 시장소득을 이용한 불평등도의 국제비교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시장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이므로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의 국제비교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以前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것이며, 가처분소득에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양자의 분리비교는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지니계수를 2000년과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이들 표를 통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의 차이는 동등화지수를 적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에는 0.004포인트였으나, 2000년에는 0.016포인트로 증

4) 이에 따라 동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원수는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는 1, 2명인 경우는 1.414, 3명인 경우는 1.732, 4명인 경우는 2, 5명인 경우는 2.236, 6명인 경우는 2.449 등이 적용됨.

KDI정책포럼

<표 2> 한국의 소득불평등도(2000년)

	동등화지수 비적용	동등화지수 1	동등화지수 2
시장소득	0.404	0.374	0.374
가처분소득	0.389	0.358	0.358

주: 1) 동등화지수 1 = 소득/(가구원수)^{0.5}

2) 동등화지수 2 = 소득/{(어른+0.5×미성년자녀수)^{0.5}}

3) 농어가 가구를 제외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를 고려함.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표 3> 한국의 소득불평등도(1996년)

	동등화지수 비적용	동등화지수 1	동등화지수 2
시장소득	0.329	0.302	0.300
가처분소득	0.326	0.298	0.296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원자료.

가하여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⁵⁾

2)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996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멕시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보다는 낮으나 그 외 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비교대상국가 중 중간보다는 다소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⁶⁾

그러나 2000년경의 경우에는, 비록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2000년경의 소득불평등도가 자세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양 기간 사이에 한국처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이들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0년경의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 상위에 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것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을 통해 서였다고 볼 수 있다면,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의 소득조사에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1년 이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구하면 2000년보다는 클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6) OECD국가는 현재 30개국이며, <표 4>에서 러시아만이 OECD국가에 속하지 않음.

〈표 4〉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국 가	지니계수				국 가	지니계수			
호 주	0.281 (1981)	0.292 (1985)	0.304 (1989)	0.311 (1994)	오스트리아	0.277 (1987)	0.280 (1994)	0.277 (1995)	0.266 (1997)
벨기에	0.277 (1985)	0.232 (1988)	0.224 (1992)	0.250 (1997)	캐나다	0.284 (1981)	0.283 (1987)	0.284 (1994)	0.305 (1998)
덴마크	0.254 (1987)	0.236 (1992)	0.263 (1995)	0.257 (1997)	핀란드	0.209 (1987)	0.210 (1991)	0.217 (1995)	0.247 (2000)
프랑스	0.288 (1981)	0.298 (1984)	0.287 (1989)	0.288 (1994)	독 일	0.244 (1981)	0.249 (1984)	0.247 (1989)	0.261 (1994)
아일랜드	0.328 (1987)	0.333 (1994)	0.336 (1995)	0.325 (1996)	이탈리아	0.306 (1986)	0.289 (1991)	0.342 (1995)	
룩셈부르크	0.237 (1985)	0.240 (1991)	0.235 (1994)		멕시코	0.448 (1984)	0.467 (1989)	0.496 (1994)	0.494 (1998)
네덜란드	0.260 (1983)	0.256 (1987)	0.266 (1991)	0.253 (1994)	노르웨이	0.223 (1979)	0.233 (1986)	0.231 (1991)	0.238 (1995)
스페인	0.318 (1980)	0.303 (1990)			스웨덴	0.215 (1975)	0.218 (1987)	0.229 (1992)	0.221 (1995)
스위스	0.309 (1982)	0.307 (1992)			영 국	0.303 (1986)	0.336 (1991)	0.344 (1995)	0.345 (1999)
미 국	0.335 (1986)	0.336 (1991)	0.355 (1994)	0.368 (2000)	체 코	0.207 (1992)	0.259 (1996)		
헝가리	0.283 (1991)	0.323 (1994)	0.295 (1999)		폴란드	0.271 (1986)	0.318 (1995)	0.293 (1999)	
러시아	0.393 (1992)	0.447 (1995)			한 국	0.298 (1996)	0.358 (2000)		

자료: 외국은 LIS 내부자료, 한국은 필자가 직접 계산.

3) 시장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를 국제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를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는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 따라 본고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LIS 소득기준 방식으로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OECD(1995)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주로 OECD(1995)에 계산되어 있는 1980년대 후반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5>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

국 가	지니계수 A (시장소득)	지니계수 B (가처분소득)	변화율:(B-A)/B×100
아일랜드(1987)	0.461	0.328	40.5
스웨덴(1987)	0.439	0.218	101.4
영 국(1986)	0.428	0.303	41.3
미 국(1986)	0.411	0.335	22.7
스위스(1982)	0.407	0.309	31.7
독 일(1984)	0.395	0.249	58.6
호주(1985)	0.391	0.292	33.9
캐나다(1987)	0.374	0.283	32.2
네덜란드(1987)	0.348	0.256	35.9
노르웨이(1979)	0.335	0.223	50.2
프랑스(1984)	0.417	0.298	39.9
핀란드(1987)	0.379	0.209	81.3
이탈리아(1986)	0.361	0.306	18.0
룩셈부르크(1985)	0.280	0.237	18.1
벨기에(1988)	0.273	0.232	17.7
평균	0.380	0.272	41.6
한 국(1996)	0.302	0.298	1.3
한 국(2000)	0.374	0.358	4.5

자료: 외국은 OECD(1995) 및 <표 4>, 한국은 필자가 직접 계산.

한국에 있어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1996년 0.302, 2000년 0.374로 앞에서 살펴본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를 겪으며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과는 달리 외국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6년의 경우는 OECD국가의 1980년대 말에 비하여 중하수준의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에도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1980년대 후반의 국제비교를 위한 세전 소득불평등도를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비교상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매년 조사되는 통계청 도시기계자료에서 산출되는 지니계수의 변동이 1980년대 후반과 1996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추론이라 생각된다.⁷⁾

한편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하여 그 변화폭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가 시장소득 불평등도에 비하여 평균 42% 감소하지만 한국은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감소폭이 커지긴 했으나 아직 5% 이내에 불과하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이전지출 규모 역시 사회복지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외국에 비해 성숙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 빈곤의 국제비교

빈곤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하여 LIS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medium income)의 40%에 해당하는 빈곤선(poverty line)을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io) 계산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경우 빈곤율은 빈곤율 이하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H(head-count ratio)를 의미하며, 앞의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1)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중위소득의 4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하였을 경우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9년의 7.7%에서 2000년에는 11.5%로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또한 시장소득을 이용한 빈곤율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전 및 세후 소득을 감안한 빈곤율의 변화는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장소득의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1996년 0.8포인트에서 2000년 1.81포인트로 두 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7)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한국의 지니계수는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0.3, 1991년에는 0.29, 1992년과 1995년 사이에는 0.28로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약간의 감소추이를 보인 바 있음.

8) 외환위기 전후 빈곤율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유경준·김대일(2002) 참조.

KDI정책포럼

〈표 6〉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1996년		2000년	
	50%	40%	50%	40%
시장소득	13.26	8.45	18.93	13.34
가처분소득	12.56	7.65	16.99	11.53

주: 빈곤율은 전체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비율과 40% 이하인 가구의 비율임.

〈표 7〉 가구유형별 빈곤율

1996년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50%	40%	50%	40%	50%	40%
시장소득	8.16	3.78	8.47	4.40	22.47	16.11
가처분소득	8.01	3.62	8.37	4.28	20.80	14.30

2000년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50%	40%	50%	40%	50%	40%
시장소득	11.22	5.89	12.90	7.54	26.21	20.27
가처분소득	10.12	4.94	13.30	7.48	22.38	14.72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빈곤율보다는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6년과 2000년에 있어 무직자의 빈곤율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높아 전체의 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유형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1996년에는 근로자의 비율이 61.9%, 자영업자 26.8%, 무직자 11.4%였으나 2000년에는 각각 55.3%, 25.8%, 18.8%로 2000년에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무직자의 비율이 상당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은 1996년의 실업률이 2.0%, 2000년의 실업률이 4.1%로 실업률 자체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이 1996년 62.0%에서 2000년 60.7%로 감소하여 무직자의 증가도 동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하여 계산된 빈곤율은 도시근로자만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가계조사 기준 빈곤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⁹⁾¹⁰⁾

9) 이에 대해서는 유경준·김대일(2002), p.32 참조. 도시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는 1995년의 8.9%에서 2000년에는 1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한편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원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는 1인 가구 12.9%, 2인 가구 16.9%, 3인 가구 21.9%, 4인 가구 33.5%, 5인 가구 10.3%, 6인 이상 가구 4.6%였으며, 2000년에는 각각 15.1%, 18.9%, 22.7%, 32.2%, 9.0%, 3.1%로 2000년의 경우 1996년에 비해 핵가족화의 현상이 더욱

2) 빈곤율의 국제비교

빈곤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2000년경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보다는 낮으나 미국과 비슷한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6년경에는 멕시코, 미국, 이탈리아, 영국보다는 낮았으며, 아일랜드,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빈곤율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표 8〉 빈곤율의 국제비교(중위소득의 40%)

국 가	빈곤율				국 가	빈곤율			
호 주	5.3 (1981)	5.4 (1985)	6.2 (1989)	7.1 (1994)	오스트리아	2.8 (1987)	4.6 (1994)	7.4 (1995)	4.4 (1997)
벨기에	2.0 (1985)	1.9 (1988)	1.9 (1992)	3.3 (1997)	캐나다	7.5 (1981)	6.3 (1987)	6.5 (1994)	7.6 (1998)
덴마크	4.1 (1987)	3.8 (1992)	6.0 (1995)	5.7 (1997)	핀란드	2.7 (1987)	2.6 (1991)	1.6 (1995)	2.1 (2000)
프랑스	4.2 (1981)	8.0 (1984)	4.8 (1989)	3.4 (1994)	독 일	2.6 (1981)	2.9 (1984)	3.3 (1989)	4.2 (1994)
아일랜드	4.4 (1987)	2.6 (1994)	4.2 (1995)	4.0 (1996)	이탈리아	5.5 (1986)	4.8 (1991)	9.4 (1995)	
룩셈부르크	1.7 (1985)	0.9 (1991)	1.3 (1994)		멕시코	15.0 (1984)	15.4 (1989)	14.6 (1994)	16.3 (1998)
네덜란드	2.3 (1983)	2.8 (1987)	3.8 (1991)	4.9 (1994)	노르웨이	2.6 (1979)	2.4 (1986)	2.3 (1991)	3.1 (1995)
스페인	6.7 (1980)	5.2 (1990)			스웨덴	2.8 (1975)	3.0 (1987)	4.1 (1992)	4.7 (1995)
스위스	4.2 (1982)	6.7 (1992)			영 국	4.6 (1986)	6.7 (1991)	6.1 (1995)	5.7 (1999)
미 국	12.4 (1986)	11.5 (1991)	11.8 (1994)	10.8 (2000)	체 코	0.7 (1992)	2.0 (1996)		
헝가리	4.5 (1991)	6.0 (1994)	3.1 (1999)		폴란드	4.5 (1986)	7.2 (1995)	4.1 (1999)	
러시아	12.7 (1992)	14.4 (1995)			한 국	7.7 (1996)	11.5 (2000)		

자료: 외국은 LIS 내부자료, 한국은 필자가 직접 계산.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빈곤율 역시 영미계열의 국가들이 북구의 국가들보다 높으며, 유럽의 국가들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의 사이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한국의 절대빈곤율 추이

절대빈곤율의 측정은 동등화지수를 사용한 상대빈곤율의 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상대적 빈곤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가처분소득이 사용되었지만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표 1>의 총소득(경상소득뿐만 아니라 비경상소득도 포함)에서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소득(가처분소득 2로 정의)이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빈곤가구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포함하여 선정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재산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의해서만 빈곤비율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절대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빈곤가구비율보다는 높게 측정된다.¹¹⁾

절대빈곤율의 추정에 사용된 빈곤선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할 때 사용된 보건복지부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가 사용되었으며, 각 가구원수별로 빈곤율을 계산한 후 가중치에 따라 가구원수별 빈곤율을 통합하여 전체의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1996년의 경우는 2000년의 빈곤선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빈곤선을 이용하여 2000년 빈곤율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원수별 빈곤선은 <표 9>와 같다.

<표 9>를 바탕으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2(총소득-사회보장부담금-조세) 기준의 경우 2000년에 10.1%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의 경우는 비경상소득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가처분소득 1(경상소득-사회보장부담금-직접세) 기준의 절대빈곤율이 5.9%임을 고려할 때 5% 중반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외환위기 전후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에 비하여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 있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절대빈곤율이 증가한 이유에서 추론할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전후 절대적 빈곤율의 상승을 가구원수별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2003년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다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모두를 환산한 소득인정액 방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2002] 참조).

<표 9> 절대빈곤선의 추이

(단위: 원/월)

연도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96	279,909	463,576	637,617	802,034	911,912	1,029,00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주: 1996년 최저생계비는 2000년 자료에서 소비자물가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2002).

<표 10> 절대빈곤율의 수준

	1996		2000	
	절대빈곤	차상위(120%)	절대빈곤	차상위(120%)
가처분소득 1	5.91	9.85	11.46	16.12
가처분소득 2	-	-	10.10	14.77
총소득	-	-	8.78	13.17
경상소득	5.06	7.94	10.06	14.39

- 주: 1) 가처분소득 1 = 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 - 직접세
- 2) 가처분소득 2 =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 - 직접세
- 3) 차상위 빈곤선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1.2
- 4) 1996년의 경우 연간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이 조사되지 않았음.

빈곤율의 변화로 살펴보면, <표 11>과 <표 12>에서와 같이 3인 이하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 유형별로는 가구주가 무직자인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6년과 2000년 사이의 빈곤율의 증가에는 고령화와 관련된 핵가족화와 가구주의 실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빈곤층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에 따라 혜택을 보는 빈곤층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절대빈곤선의 12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빈곤선을 이용하여 절대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2000년에는 가처분소득 2를 기준으로 약 15%, 1996년에는 약 9% 정도로 추정된다.

KDI정책포럼

〈표 11〉 절대빈곤율의 추이(가처분소득 1 기준)

		1996	2000
전 체		5.91	11.46
가구원수	1인	14.03	22.88
	2인	8.89	14.98
	3인	4.28	8.52
	4인	3.14	7.22
	5인	4.19	8.29
	6인 이상	3.87	7.83

〈표 12〉 가구주 유형별 절대빈곤율(가처분소득 1 기준)

	근로자 빈곤율(%)	자영업자 빈곤율(%)	무직자 빈곤율(%)
1996	3.42	2.20	28.13
2000	4.86	6.88	37.02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주된 원인은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실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절대빈곤율의 상대적 증가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절대빈곤율은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취업자의 감소로 외환위기 전후 약 2배 정도 상승하여 빈곤문제가 현 상황에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에서, 2000년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의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중간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1996년경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각각 OECD국가 중에서 중하위수준과 중상수준의 소득불평등도

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전반적인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북구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이 중간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미계의 국가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그룹국가들의 상이한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구국은 지나친 소득격차의 확대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여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하에 소득상위층에 대한 세율을 높게 하고, 또한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높게 하여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정책방향을, 영미국은 개인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시장경쟁에서 소외된 근로자는 국가에서 주로 빈곤정책으로 보호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¹²⁾

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에 있어 복지 및 분배정책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가 외국에 비해 아주 적게 나타나는 점은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그동안 중산·서민층 위주의 경감정책으로 인해, 세부담이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구의 나라를 예외로 하면, OECD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공평과세의 실현 및 조세의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수직적 형평성보다는 수평적 형평성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체계를 누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의 향상이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문제도 본격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시행

12) 이에 따라 고용과 실업 등 경제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영미식 국가들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KDI정책포럼

〈표 13〉 최고세율 적용구간 국제비교

(단위: 원/월)

연도 \ 가구원수	한 국	프랑스	영 국	독 일	일 본	미 국
최고세율	36	45	40	48.5	37	35
적용구간(만원)	8,000	5,500	5,400	30,800	17,700	33,900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배수	8.1	1.6	1.7	2.1	4.2	8.5

주: GDP 대비.

자료: 재정경제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2003. 8.

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소득불평등도의 분석을 통하여 그 방향을 좀더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본고의 분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결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향후 한국도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8년 이후에는 현재와는 다른 시장소득과 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고려가 소득재분배정책의 입안과정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2003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관련지출(OECD 기준)이 10% 미만으로 추정되어¹³⁾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표 14 참조),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보장제도가 성숙(예: 국민연금의 수혜자 비율)됨에 따라 사회복지관련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표 15 참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를 억제하거나 빈곤의 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그 증가 속도는, 일반적으로 한번 증가한 복지예산은 다시 감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대상 및 수준의 확대도 필요하겠으나,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빈곤율도 소득불평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OECD국가 중 빈곤율이 최상위에 있는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전후 절대빈곤의 증가는 가구원수별 빈곤율의 변화나 가구주 유형별 빈곤율의 변화로 추론할 때,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

13) 문형표 외(2000)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 현재 7.53%로 추정되고 있음.

<표 14> OECD 각국의 사회지출수준 비교

국 가	GDP 대비 사회지출
일 본	11.5
노르웨이	25.6
미 국	14.1
캐나다	16.9
네덜란드	29.2
영 국	20.8
덴마크	28.6
이탈리아	22.4
독일(≤ 90)	24.4
독일(> 90)	27.0
프랑스	27.0
스웨덴	32.4

자료: The World Outlook 20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rom the OECD.

<표 15>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50,598	70,017 (38.3)	97,713 (33.8)	99,948 (6.7)	109,210 (9.3)

자료: 각년도 예산안.

후 가구주의 실적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 적정한 소득불평등도

14)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주로 실직에 기인했다면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감소해서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감소는 이전에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하여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실직상태에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나가버린 경우(무직자)와, 경제활동참가 자체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외환위기 전후 실업률의 증가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켰으나, 그 반대인 실업률의 감소로 인한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함.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62.5%였고, 2002년은 61.9%, 2003

의 유지 문제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관계된 철학적인 측면이 가미되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경제에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할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실직 등에 기인하여 2배 이상 높아진 빈곤문제에 국가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첫 번째 및 두 번째와 관계되는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국제비교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OECD국가에서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이 북구계열, 유럽, 영미계열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이 각 나라에 있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럽의 OECD국가들과 미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의 개혁이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는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려는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의 <표 1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술진보, 개방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판단되며, 이를 정부의 재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무리하게 역전시키려 할 경우 오히려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 앞에서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은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들(유경준·김대일[2002]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급상승한 주된 이유가 실직 등 구조적인 원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회복을 통한 고용창출은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고, 빈곤율을 하락시키는 기본적인 단추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미식의 경제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을 중시하되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근

년은 61.8%로 예상되어,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점은 본고의 3장 및 유경준·김대일(2002) 참조.

〈표 16〉 소득분배의 추이: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한 결과 요약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후반	1980년대 OECD 연구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후반
호주	0	+	+
오스트리아	0	0	++
벨기에	0	+	+
캐나다	-	0	+
체코	na	na	+++
덴마크	na	na	-
핀란드	-	0	+
프랑스	-	0	+
독일	-	+	+
헝가리	na	na	++
아일랜드	-	0	++
이스라엘	0	0	++
이탈리아	--	-	++
일본	0	+	++
멕시코	na	na	++
네덜란드	0	+	++
뉴질랜드	0	+	+++
노르웨이	0	0	++
폴란드	na	na	++
러시아	na	na	++
스웨덴	-	+	+
스위스	na	na	+
타이완	0	0	+
영국	++	+++	++
미국	++	++	++
+++	소득불평등의 상당한 증가(15% 이상 상승)		
++	소득불평등의 증가(7~15% 상승)		
+	소득불평등의 소폭 증가(1~6% 상승)		
0	변화 없음(-1~1%)		
-	소득불평등의 소폭 감소(-1~6% 하락)		
--	소득불평등의 감소(7~15% 하락)		
---	소득불평등의 상당한 감소(15% 이상 하락)		
na	측정될 수 없음		

주: 위 결과들은 주로 지니계수와 같은 몇몇 소득지표들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추이들을 반영한 것임.

자료: LIS 내부자료 및 Smeeding(2002)에서 정리.

로능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책임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분배나 성장이나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의 회복을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분배 및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설계를 통한 탈빈곤으로 설정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석훈, 『소득분배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미발표원고, 2003.
- 문형표·오영주·이희숙,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문형표·고영선(편저),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보건복지부, 『200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2002.
- 유경준,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원인분석』, 『KDI 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유경준·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유경준·김용성,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복지지출수준에 대한 소고』, 미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 재정경제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003. 8.
- OECD,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prepared by Anthony B. Atkinson, Lee Rainwater, and Timothy M. Smeeding,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 18, 1995
- OECD,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Area*, prepared by Michael F. Forster, assisted by Michele Pellizzari, OECD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 42, 2000.
- Smeeding, Timothy,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the Rich Countries of G-2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LIS)," LIS Working Paper No. 320, July 2002.